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모델의 제안: 통일 단계에 따라

채 정 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김 중 남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는 '통일교육은 근본적으로 통일에 대한 심리교육이다.'라는 사람중심의 통일교육 관점에서 한민족에게 교류의 활성화와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심리적 요소에 대해 통일교육을 해야 하는지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배경은 독일의 경우 통일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전한 통일 즉, 내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30년 내외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독일이 하지 못했던 이 교육을 통일 이전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독일과 달리 통일 이전의 교류시기가 상당히 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교류시기에 이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에서 중시해야 할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의 요소는 이데올로기 중심의 통일 교육을 넘어서서 교류와 통일 시기에 개개인의 심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응력 증대 방안으로 이것을 통일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요어 : 통일, 교류, 교육, 심리, 통합

[†] 교신저자 : 채정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 02-3290-1636, E-mail : minspin@unitel.co.kr

세계사를 통해 볼 때, 분단과 통일은 수 없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독일 통일, 예멘 통일, 베트남 통일과 같은 통일 사례뿐만 아니라 중국 진의 통일, 우리나라의 삼국통일 등 무수히 많은 통일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통일은 세계 각지에서 수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일이 과연 체제만을 위한 것 즉, 체제의 강화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해당 구성원들 즉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에 대한 연구는 깊이 이루어지지 않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그 어느 통일 과정에서도 구성원들을 위하는 것 즉, 구성원들의 복지와 안위를 위한 것이 표면에 내세워졌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구성원들이 통일 전후 과정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 혹은 만족을 얻었을 것이다. 통일 독일도 이러한 면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제 우리 한민족이 통일을 염원해 온 지도 반세기가 넘어서 머지않아 1세기가 되려고 하고 있다. 현재도 언제 통일이 될 지, 어떠한 방식으로 될 지, 어떠한 변화를 낳을 지 등등에 대해 종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통일이 앞서 언급한 바대로 심리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접근과 대비책은 궁극적으로 심리적인 접근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하고 체계적인 모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접근에 의한 체계적인 모형이 마련되었는가? 답은 ‘아니다’이다. 다만, 통일문제에 대해 심리학이 전혀 개

입할 수 없었던 20여 년 전에도 우리 한민족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라고 외치며 노래했다. 이것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정서라는 심리적 요인을 정부가 강하게 이용하려고 했다는 점과 함께, 국민들도 실제 통일을 정서적으로 내재화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모형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남한의 통일교육은 초창기인 1948년부터(김용민, 정상돈, 원준호, 2004) 1980년대 중반까지 반공교육이 핵심이었다. 이것은 한만길(2001)이 주장하듯이 우리 사회의 철두철미한 반공의식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 이것의 정점이 곧 적색혐오증(red complex)이다. 즉, 거의 분단 직후부터 통일교육에는 곧바로 심리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통일교육에서도 이러한 심리적 측면이 관련되어 있다. 최근 변화된 통일교육은 사회문화적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김용민 등, 2004). 이 사회문화적 접근방식이란, 북한주민들의 일상 생활문화 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문화 이해를 통한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추가되어야 할 통일교육의 요소로서 정현백, 김엘리와 김정수(2002)가 주장한 것은 평화교육인데, 여기에서도 심리적 측면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만길(2001)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 평화교육의 핵심은 남북한 간 혹은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 해소와 적대감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와 화해의 증진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졌거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나 향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통일교육 방향 모두에서 심리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조되고 있는 ‘남북의 심리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서도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의 통일교육에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적 틀과 심리학자는 배제되어 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는 거론되었지만 사람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없었다.

한편, 우리의 통일 동반자인 북한에서도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리적인 요소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이나 성격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교육 체계와 내용이 없다. 단지, 김용민 등(2004)에 따르면, 민족에 대한 민족관, 남한에 대한 남한관, 통일에 대한 통일관만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점은 정신 무장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김용민 등, 2004) 심리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북한의 교육 내용 구성과 교육 진행 과정에서 심리학적 틀과 심리학자는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고려나 배려도 없다.

이상 남북한의 통일교육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통해 볼 때, ‘통일은 심리적 문제이다’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심리학자의 전문적 개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서 통일교육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 모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배제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우리 내부의 상황 맥락뿐만 아니

라 우리보다 먼저 분단국가를 탈피한 독일의 경우에서도 심리적인 문제가 통일과 매우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형식적으로는 동독이 자체 국민투표를 거쳐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서독 기본법(Grundgesetz)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형식을 띠었지만, 실제로는 서독의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흡수 통일’이라고 불린다(Weidenfeld & Korte, 1996). 물론 이 통일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독의 앞선 경제력으로 동독의 경제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다. 과도한 통일 비용에 따른 세금 인상, 이 때문에 통일 독일의 경제가 통일되고 2~4년 후에 후퇴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동독인의 2등시민화(전태국, 2000)’, ‘서독인의 승리자 증후군(전태국, 2000)’, ‘사회 분열(김혜순, 2002; 이해영, 2000)’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독일에서의 동서독 주민 간 여러 사회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길게 그리고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쿨 수상과 같은 통일을 지휘한 장본인조차도 1994년 가을, 통일 4주년 관련 인터뷰에서 한 다음과 같은 말은 경청할 만하다.

“서독의 풍요가 단 4년만에 이룩되지 않았음을 동독인들이 이해할 때, 그리고 동독인들은 서독 수준에 이르기까지 40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서독인들이 이해할 때, 비로소 심리적 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김영탁, 1997, 404~405쪽)

마지막으로 위의 2가지 측면과 연계된 것으로서 통일의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순수한 상상(pure imagination)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기반한 상상(reality-based imagination)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통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는 독일의 통일이 우리 상황에서도 그대로 펼쳐질 것으로 자기암시를 주기 때문이다. 이 실제에 기반한 상상은 앞으로 우리 한민족이 통일된다고 할 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작용하여 과거 독일에서 발생한 것이 특히, 부정적인 것들이 거의 그대로 우리 상황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한 이유는 민족통일연구원(1994, 上, 下)도 결정적으로 제시했듯이, 한국과 서독 양국이 분단 상황도 유사하고, 나아가서 한국이 서독의 독일 정책(Deutsch landpolitik) 내지 동방정책(Ostpolitik)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통일원의 창설, 북방정책, 남북한 기본합의서 합의, 분단질서 관리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2000년 6.15 남북정상간 공동선언이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이 독일의 통일 과정과 매우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고찰할 것인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제기된 심리학적 문제

우리가 독일 통일의 사례를 점검함에 있어서 민족통일연구원(1994 上)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내용을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다. 민족

통일연구원은 통일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실제로 독일이 내세운 사회통합의 기치인 '내적 통합'은 발생 요인 측면에서나 내용 측면에서 모두 각종 사회적 문제와 밀접하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심리적 측면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독일에서는 통일에 대해 심리학적 시각을 가졌는가? 가졌다면 어떤 심리학적 시각이 있었는가? 동서독 정부가 서로 다른 통일 관점을 가지고 각기 다른 정책을 펴 왔던 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¹⁾,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상호 수렴하는 통일 관점에서 상호 협력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의 선회는 동서독 간의 상호 인정과 교류라는 차원에서 통일의 중요한 초석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서독 간의 상호 인정과 교류는 사회학적으로는 다문화 사회의 구성이라는 형태로, 심리학적으로는 다원화 의식의 구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내게 하였다는 점에서 심리학적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서독인들은 동서독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통일에 대해 그리 강한 열망을 가지지는 않았다. 특히, 통일될 당시에는 거의 최저 수준의 통일 열망을 보였다(민족통일연구원, 1994 上). 이는 다시 말해 동서독인들이 통일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과, 통일과 심리학이 전혀 관련을 맺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1) 동독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동독과 서독이 서로 다른 즉, 이민족이므로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을 가지기도 했다.

둘째, 첫째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서, 독일에서는 통일을 위해 심리학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의 문제이다. Steiner(1999)는 통일이전에 동서독의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분석적인 면에서나 기본 구상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독일의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독일에서는 통일 후에라도 심리학적 개입이 이루어졌는가? Genesko(2000)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통일 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심리적 문제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심리학적 연구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심리학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 초반 즉, 통일 이후 1~2년 사이에는 통일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고, 서독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시로 문제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흘러가면서 통일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대신 실망감과 속았다는 느낌이 구동독인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구서독인들도 세금 부담의 증가와 구동독인들의 고마워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분노가 일기 시작해서 심리적 문제가 많이 노정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통일 직후에는 각종 언론사와 경제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식으로 통일과 관련된 독일인들의 심리적 변화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예, Genesko, 2000). 이에 따라 통일이 된 지 17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이러한 변화의 추세 파악이 가능하다. 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성공적인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문제 해결 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학적 개입이 정확히 통일

교육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프로그램이나 개별 연구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심리적 후유증만 존재했는가? 그렇지만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서, 구동독인들이 통일 이후 불만만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들은 통일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후유증보다는 심리적 만족이 훨씬 더 컸다(Schmitt, Maes, & Seiler, 1997).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통일 후 불만을 갖고 부적응하는 모습으로 주로 그려졌는데, 이는 아마도 기대 수준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김영탁(1997)은 동서독의 통일이 40년간의 서로 다른 체제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양쪽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으로 심한 격차를 느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았다. 김영탁의 이 견해가 모두 옳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혼란과 문제는 통일과 같은 거대한 사회 변동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심리적 적응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얼핏 보아 심리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이를 심리적 문제로 귀결시켰는가? 성태규(2002)에 의하면, 실제 독일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문제, 구동독인들의 자체 정치세력화 등의 정치적 문제,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와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주 문제와 구동독인들의 구체제 향수심 등의 사회 문제, 구동서독군 통합 시 발생한 조직 통합과 갈등 등의 군사 문제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한결같이 궁극적으로는 구동독인과 구서독인의 심리적 갈등과

사회 분열이라는 심리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일문제의 심리귀결화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 문제에 대해 채구묵(1998)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는 통일과정에서 흡수통일방식을 취하다보니 정책당국자들이 통일정책 수립 시 사회 심리적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통일의 핵심 문제는 심리적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 문제의 해결여부가 다른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통일의 끝을 어디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통일의 끝은 심리적 문제의 종료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 문제는 통일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기간이 어디까지이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통일 이후 30~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Kohl 수상의 연설 내용뿐만 아니라 Galtung(1989)이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제시한 다음의 공식과 de Maiziere 전 동독수상의 일화에서 알 수 있다.

Galtung의 사회통합 공식
: 치유기간(Y) = 상처기간(T년) + 40년

전 동독수상 데 메지에르는 1997년 3월 본(Bonn)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 적이 있다고 소개하였다. 즉, 6살 난 손녀가 TV를 보다가 DDR이라는 말을 듣고, “할아버지, DDR이 뭐예요?”하고 물었다. 이에 데 메지에르는 “그것은 할아버지가 해체한 나라인데, 네가 어른이 되어 역사책을 보면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 어른이 되면 독일은 완전히 같아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김영탁, 1997, 398쪽).

de Maiziere 전 동독수상의 일화가 의미하는 바는 통일 이후 출생한 세대가 아니라면 통일이라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뇌리에 남아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Galtung의 이 공식과 de Maiziere 전 동독수상의 일화에서 통일의 끝은 심리적인 문제의 종료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얼마나 긴 시간을 요하는 지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통일에서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통일교육

위와 같은 심리적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국민들 각자에게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심리적 측면에 대한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국민 개개인이 통일 전후시기에 통일과 관련하여 겪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통일이라는 국가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심리적 측면에 대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효과는 어떠하였는가? 먼저, 동독과 서독에서 통일 전에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독의 경우는 오히려 마르크스 유물사관에 따라 서독보다 동독을 우위에 놓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였고, 서방세계와 서독이 ‘민주주의’에 대립하는 체제로서 민족통일을 방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사악한 존재라고 가르쳤다

(김용민 등, 2004). 이 교육 때문에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 서독 주민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였다고 김용민 등(2004)은 주장하였다.

하지만, 서독에는 역사가 오래된 시민정치 교육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 성인교육, 학교 밖의 청소년 교육, 직업교육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들은 통일의 기반이 되었고, 통일 이후에는 동독 지역으로 전파되어 동독 지역의 민주화와 사회문화적 통일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한만길, 길은배, 강영혜, 김학성, 오해섭, 최영표, 2003).

반면,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독일에서의 현재 여러 사회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일교육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미진했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주장이다(예, 이해영, 2000). 또한, 김용민 등(2004)은 독일에서의 여러 연구를 토대로, 서독에서의 정치교육도 분단, 통일 문제, 동독 문제와 관련해서는 편향성을 지녀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서독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동독문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배웠고, 동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적었다는 지적하였다(김용민 등, 2004).

이러한 점들이 시사하는 바는 2가지이다. 첫째, 독일에서의 통일교육이 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몰라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동서독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의 심리적 측면에 대해서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에서 심리적 측면이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는 이러한 점들이 개선되었는가? 답은 ‘약간은 개선되었지만 대체로 미흡하다’이다. 정상돈(2001)의 주

장에 따르면, 통일 이후 독일 정부는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정치교육에서도 이를 시민들에게 함양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로는 ‘동독은 잘못되었고, 서독은 옳다’는 식의 비민주적 태도를 교육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특징을 재정리해본다면, ‘서독 위주, 흑백 논리적 사고, 동독주민들의 이전 삶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Dumcke, Wolfgang/Ost, Burkhard, 1998; 정상돈 2001에서 재인용).

따라서 독일에서는 통일 이전이나 통일 이후에도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통일교육은 바람직하게 진행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일 이후에도 서독 위주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한민족의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

현재까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염원은 강렬했지만, 통일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금까지 통일 전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을 지역적으로 거론한 경우는 있지만(예, 차재호, 2000), 심리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나아가 이들 문제들을 해결할 방도 특히, 통일교육 형태나 그에 준하는 형태로 해결할 방도를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심리학적 제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좀 더 통일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란이 많은 문제 즉, ‘분단과 통일’, ‘통일 대 통합’, ‘통일의 시기

세분화'에 대해 먼저 개념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분단과 통일

독일이 통일하려고 했던 것은 원래부터 독일은 하나이었기 때문이었다.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로 통일이 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의 책임을 지고 연합국에 의해 분단되어 40여년을 지냈기 때문에 다시 합치자는 생각이 나온 것이다. 우리 남북한도 마찬가지로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분단시대의 청산, 분단의식의 극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분단 시대의 청산은 대외적으로는 외교를 통해서, 남북한 내에서는 정치와 경제협력 등의 제도적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제 2차 북핵 문제의 해결 분위기, 남북한 종전 선언 추진, 2차에 걸친 남북한 정상회담, 개성공단 등의 경제협력,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의 개선 조짐 등이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분단의식의 극복 문제는 간단치 않다. 여기서 말하는 '분단의식'이란, '1960년대 후반 경제발전의 진행과 함께 시민사회에서 분출하는 대중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억제하면서 북으로부터의 위기를 생산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구성된 분단체제의 담론인 일면국방, 일면분단 담론(김정훈, 2001)'으로 볼 수 있다. 이 분단의식을 김정훈(2001)은 '반공의식과 발전주의의 접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을 가진다면 우리

가 발전을 멈추거나 후퇴하면서까지 통일을 하려는 생각을 하기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북으로부터의 위기'라는 점은 현재에도 북한을 적대시하는 레드컴플렉스(red complex)라는 형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서 현실생활에서도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개인들의 행동반경을 위축시키고, 정신세계를 구속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문제이다. 이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이 '한민족의 정신적 해방'이라는 성격 을 지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낙청(1998)은 분단의식보다 더 강력한 '분단이데올로기'를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남쪽의 재야운동에서 흔히 지적하는 극우반공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북쪽의 공식이념인 통일지상주의 역시 객관적으로 보면, 분단정권의 유지와 분단체제의 재생산에 복무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결국 분단이데올로기 형식이든 분단의식 형태이든 우리 남북한 주민들에게 국가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리적인 기제를 중심으로 한 해결방안을 담은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대 통합

우리는 분단국 입장에서 지금까지 별 의식 없이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즉, '통일'과 '통합'이 유사하다는 관점과 이들이 서로 다르다는 관점이다. 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이 합치는 것을 '통일'로만 규정

하면 ‘통합’을 상대적으로 경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통일을 논의하거나 한민족 통일을 논의할 때마다 통일보다는 통합을 중시해야 된다는 시각이 있어 왔고, 이 통합은 결국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해영(2000) 등이 통일 독일에 대해 ‘분열된 사회’라고 강조한 예가 여기에 해당된다.

원래 ‘통합’이라는 개념은 Galtung(1989)에 의해서 정의되었다. 그는 국가들이 합치는 것을 통합(integration)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통합을 정의하였다. 즉, ‘둘 이상의 행위자들이 새로운 하나의 행위자로 되는 과정이다. 그와 같은 과정이 완결되었을 때, 그 행위자들은 통합되었다고 한다’. 단, 그는 ‘통합’만을 다루었을 뿐 ‘사회통합’이라는 점은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통합’을 ‘사회통합’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사람의 통일’ 혹은 ‘마음의 통일’, ‘심리 통일이나 심리통합’ 등의 용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 ‘사회통합’을 ‘심리통일이나 심리통합’이라는 의미로 개념 정의한다면, 이 사회통합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디에서도 나타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사회는 하나의 구조를 지니기는 하지만 다양한 특성과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고, 심리적으로 통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Galtung(1989)의 관점을 적용해 본다면, 가장 작은 형태의 사회인 가족에서마저도 이러한 심리적 통합을 보이기 쉽지는 않다. 그 이유는 부모와 자녀 간의 연령 차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 사이의 성적 차이, 남편과 아내의 결혼 전 생활 경험의 차이와 결혼 후 생활 경험의 차이, 각자의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역할의 차이 등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룰 수 있는 사회통합이나 심리통일 내지 심리통합이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긍정적인 결합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통합’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국민들 간의 심리적 통합이라는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사회통합이라는 용어보다는 이 용어와 혼용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의미의 강도가 낮아서 잘 사용되지 않는 사회 화합, 인간 화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각 개인들이 하나의 독특한 개체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단순히 집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충돌하지 않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용이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의 심리학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시각인 통일과 통합을 다르게 인식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통일보다는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장호(1999)는 ‘통일’에 대해 ‘남북 민족공동체(남북 생활공간의 통합)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 남북 공동체 사회는 ‘반드시 제도나 가치관이 통일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았다. 이는 통일에 있어서 심리적 요소가 배제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차재호(2000)도 통일에 대해 ‘통일이란 사건은 두 개의 다른 사상적·정치적 체제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사상적·정치적 체제로 융합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았다. 또한 ‘통일’이라는 사건은 두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이

모여 생기는 사건이 아니다...(중략) 통일은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고 어찌 보면 국제적인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이장호(1999)의 시각과 비슷한 것으로서, 통일을 '국가들끼리 구조를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며,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통합 추구적 관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통일보다 상위의 목표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즉, '먼저 통일을, 나중에 통합'을 달성하는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시각은 통일을 먼저 달성 하자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즉, 통합을 추구하고 어느 정도 통합이 이루어지면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통일을 이루기가 국제정치적 역학으로 어렵거나 통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일 이전의 상당한 교류시기를 갖고 이 시기에 통합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구현되고 있다. 즉,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상호 체제뿐만 아니라 양측 주민들이 긴밀한 상호작용과 공동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인간적으로 상호이해와 의존을 강화시켜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통일'을 포기하고 '통합'이라는 용어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현 국면에서는 '통합'이라는 용어의 어감이 '통일'이라는 용어의 어감보다 '한민족의 하나 되어 어울어지기'에 대한 관심도, 중요도, 협조도 등에서 낮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고, 실제로 그 어느 사회도 완전하게 '통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회는 갈등과 통합을 변증법적으로 해결해야만 더 강해지고 발전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내용이 담긴 '통일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의 시기 세분화

통일된 독일에서나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통일 이전(시기)', '통일 과정 혹은 진행(시기)', '통일 이후(시기)'와 같은 용어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없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통일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의미 전달의 혼선을 피하고, 연구와 문제 해결, 그리고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체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1989년 11월 9일 이전을 '통일 이전 시기'로, 그 다음부터 1990년 10월 3일 동독 지역의 연방주들이 서독의 기본법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면서 신연방주로 가입한 시점까지를 '통일 과정 시기 혹은 통일 진행시기'로 보고, 그 다음 시기를 '통일 이후 시기'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재호(2000)가 통일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와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일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통일은 시작과 끝이 한 시점에서만 존재한다. 즉, 통일 선언이 통일의 시작점이자 통일의 종료점이다. 독일이 1990년 10월 3일에 '통일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통일이 시작된 시점을 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통일이 완성되었다는 종료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너무 논리적인 것으로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제공하는 데는 적절

하지 않다. 따라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을 하는 순간을 통일의 시작점으로 하고, 그 노력이 끝나는 시점을 종료점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인 관점이다. 이 시각을 독일의 사례에 적용해본다면, 독일 통일의 시작점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사건 이후 서독 정부가 이에 대한 연계 작업으로서 통일 작업을 착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 종료점은 1990년 10월 3일 통일 선언이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각도 ‘구조적으로 하나 되기’라는 시각으로만 보는 통일관이다. 그래서 이 시각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각 개인들에게 통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효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차선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기간을 정의해야 하는가? 우리의 경우도 논리적인 입장보다 현실적인 입장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단,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면, 독일의 선례를 따라가되, 흡수통일식의 급작스러운 통일을 원하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고, 2007년 10.4 선언이 준(準) 평화체제 선언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상당기간의 남북 국가연합식²⁾ 혹은 남북 연방제식³⁾의 느슨한 통일 형태 내지 교류시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독일과는 약간 다른 현실주의적 관점

- 2) 2개 이상의 국가가 각각의 군사권과 외교권과 같은 주권을 보유한 상태로 하나의 국가처럼 협력하여 초국가를 이루는 형태를 말한다. 과거의 EU가 이와 유사한 형태이었는데, 현재 EU는 연방제와 국가연합제의 중간 형태에 있다.
- 3) 2개 이상의 국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포함한 국가의 모든 권한을 1국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해당 연방들은 자치를 담당하게 되는 형태를 말한다. 미국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는 교류시기를 향후 선언된 ‘종전 선언’ 내지 ‘평화협정 선언’을 시발점으로 해서 향후 통일을 선언하는 시점 이전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 진행시기는 통일 선언으로 바로 통일이 완성된다면 아주 짧은 특정 시점에만 해당된다. 만일 통일 선언 이후 특정한 시점까지를 통일을 진행하는 시기로 법률이나 정책으로 규정한다면, 그 기간 동안을 통일 진행 시기로 보면 된다. 그리고 통일 이후 시기는 논리적 특정 시점 이후로 규정하거나 현실적 통일 진행 시기가 완료된 이후로 규정하면 된다. 이러한 구분은 곧 우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통일교육에 모두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통일교육은 이러한 시기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함택영, 구갑우, 김용복, 이항규(2003)가 통일 시기에 따라 구분한 통일교육의 유형들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이들의 제안을 완전한 통일교육 유형 분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제 4유형의 교육과 제 5유형의 교육 등이 완전히 배타적일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단, 여기서 제시된 ‘두 개 체제의 공존’이 정확히 ‘교류시기’의 통일 교육 유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북한관을 한민족으로 보는 시각과 결합시키면 ‘교류시기’의 통일교육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가 통일 환경에 적합한 통일교육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함택영 등(2003)은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회담에서 선언된 바에 따라

	한민족	제 4유형 탈분단교육	제 6유형 북한사회이해교육	제 2유형 민족공동체교육
북한관	타자	제 5유형 다문화 이해교육 갈등해결교육		
	적	제 3유형 안보교육		제 1유형 승공통일교육
두 개 체제의 공존			단일국가의 건설	
통일관				

그림 1. 통일교육의 유형

출처: 함택영 등 (2003). 남북한 평화체제의 건설과 통일교육: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수렴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9(4), 53쪽.

표 1. 심리적 의미를 지니는 교류시기와 통일 이후의 거시적 요인 비교

추론 방식	차원	교류시기	통일 이후	비교
논리적 추론	남북한 간 경계	있음	없음	
	국적	각자 다른 국적	모두 동일 국적	집단 구분
	제도의 완전성	약함	강함	
	상호작용	상대적으로 약함 (교류의 폭이 좁음)	상대적으로 강함 (전 범위의 교류)	
	관계의 안정성	약간 안정적	안정적	
	남북한 국민정체감	강함	약함	
	통일 압력	존재(통일기반기능)	없음	동질화 압력
	체제 이데올로기	중간	약함	
	표준화	중간	매우 강함	
	관계의 대칭성	약함	강함	
경험적 추론	과거의 영향력	강함	약함(과거 정리 압력 증가)	
	양측 내부 갈등	강하게 존재	약하게 존재	
	민족주의	강함	약함	
	시민 의식	중간	강함	
	사회 복지	중간	강함	
	후유증 논란	중간	강함	교류시기부터

장차 완전한 통일 이전에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점점을 찾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의 교류가 필요하게 되므로 이 경우 기존 통일교육의 방향성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통일 시기 구분은 각 시기별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좀 더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과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심리적인 과제를 도출하여 적실성 있고 적응력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통일 시기의 특징뿐만 아니라 교류 시기의 특징에 대해 그동안 규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교류시기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이 시기에 적합한 심리적인 측면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집단적 특징을 통일 이후와 비교하여 표 1과 같이 규정하였다.

교류시기의 핵심 특징은 과거보다는 안정되고 희망적이며 평화로운 시기이지만,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과도기적이고 여러 문제가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중적인 측면이 강하며,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모두 ‘하나 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에 대한 추론은 통일 문제에 고유한 논리적 추론 방식, 즉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귀결하는 추론 방식과 경험적 추론 방식, 즉 독일 통일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되었고 우리 상황에서도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방향으로 귀결하는 추론 방식 등 2가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논리적인 추론 방식에 의해 다음과 같

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남북한 경계는 교류시기에만 존재하고 통일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국적은 현재 양측이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통일이 되면 모두 동일한 국적을 지니게 된다. 셋째, 각종 제도의 완전성은 교류시기에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다. 넷째, 상호작용은 교류시기에는 그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교류의 폭이 넓어지지만, 통일 이후와 비교해본다면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다. 다섯째, 교류시기에 남북한 간의 관계 안정성은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이전보다는 안정적이고, 통일 이후에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 여섯째, 남북한 양측 주민의 국가에 대한 집단 정체감은 교류시기에는 강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약화된다. 단, 독일의 구동독 주민들이 통일 후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과거로의 회귀(Ostalgie)’ 현상을 보인 점을 감안해보면, 통일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 문제는 남을 수 있다. 일곱째, 통일 압력은 교류시기에는 강하게 존재할 것이고 이는 곧 통일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지만, 통일 이후에는 이미 통일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통일 압력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통일 압력, 즉 ‘사회통합’이나 ‘사람의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간의 동질화 압력으로 변화될 여지는 남아 있다. 여덟째, 남북한 양측이 각기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의 체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교류시기에는 지금보다 덜 강조되는 수준에서 기능하다가 통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덜 강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 등 제반 영역에서 표준화가 교류시기에도 진행되고 통일 이후에도 진행되는데, 교류시기에는 중간 정도로, 통일 이후에는 매

우 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험적 추론에 따르면, 첫째, 과거의 영향력은 교류시기에는 여전히 작용할 수 있지만 통일 이후에는 많이 완화될 것이다. 즉 과거의 의식과 행태, 특히 양측 주민들이 상호간 경험했던 전쟁이나 다툼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과거의 영향력은 교류의 시기에 최대한 제거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 단, 이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의 문제이므로 교류시기가 길어질수록 교류시기의 후반부에도 완화의 여지를 담고 있다. 둘째, 남북한의 관계 대칭성은 교류시기에는 경험 등과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점차 균형을 잡아나가면서 통일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양측 내부의 갈등 압력은 교류시기에 크게 작용하여 현재 남한 내부에서 드러난 ‘남-남 갈등’과 같은 문제가 더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단, 통일 이후에는 크게 정치적 불안이 없다면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만 발생할 것이다. 넷째, 민족주의가 몇 가지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류의 시기에 강하게 작용하여 통일의 기반 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통일 이후에는 작용할 여지가 크지 않으므로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한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다섯째, 시민 의식은 현재도 남한에서는 중시되는 것이지만 교류시기에는 북한에서도 중시될 것이며, 통일 이후에는 양측 모두에서 더 강하게 중시될 것이다. 여섯째, 사회복지에는 교류시기에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강화하여 중간 정도를 유지하겠지만, 통일 이후에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사례에서처럼 통일에 따른 후유증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는 통일이 되기 전부터 커질 것이고, 통일 이후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될 것

으로 보인다.

양측 주민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교류시기에는 변화가 강하게 지각되어 적응 압력이 커지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들이 속해 있는 정부 당국과 제도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보호받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것이 통일 이후에는 소위 ‘무한 경쟁’ 상태가 되어 양측 주민 개개인들은 스스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Steiner(1999)는 동독의 서독에로의 흡수통일이 모든 정치영역과 사회적, 정치적 삶의 영역에서 독일의 통일과정을 형성해나가는데 있어서 구동독인들의 개인적 생활영역과 생애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그는 이들 중에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김영탁(1997)은 특히 구동서독 주민들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치유할 방도는 별로 없다고 보았다. 그는 기껏해야 동서독 주민들에게 서로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해주거나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영탁(1997)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이러한 심리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연방주의 경제 재건을 앞당겨 물질적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김영탁(1997)의 이러한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심리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한 점이 드러난다. 즉, 심리적 격차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측면의 통일 교육도 실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적 문제를 직접 치유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감안한다면 통일 이전 시기인 교류시기에서부터 심리적 문제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대처 기술과 대처 의지를 갖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그것은 이러한 내용을 통일교육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민족의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의 핵심 내용

앞서 살펴본 문제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큰 ‘한민족의 오래된 통일 저해 요소 극복’, ‘독일에서 전이되는 요소 차단’,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 제고’, ‘후유증 해소’라는 심리적 문제들을 명료화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통일교육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

한민족 내부의 통일 저해 요소 차단

우리 민족이 가진 통일 저해 요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없이 강조되어 왔다. 이들 요소 중에서 심리적 측면만을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주민 상호간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 남북한 상호 적대감 등이다. 둘째, 남북한 직·간접적인 상호작용의 부정적인 결과가 있다. 예를 들면, 6.25 전쟁경험과 레드컴플렉스 등이다. 셋째, 통일교육의 부정적 효과 내지 역효과이다. 남북한 문화이질감,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 남북한 양측 각각의 체제 정통성과 우월의식 등을 말한다. 넷째,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 요소이다. 통일 무가치화 혹은 절대가치화, 통일 비용 부담의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째, 남북한 내부의 부정적인 문화 심리적 요소이다. 예를 들면, 보수적 권위주의 문화, 파행적 의식구조로서 의존성과 분파의식과 자폐성, 남남갈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5가지 종류의 통일 저해 요소는 6.25 전쟁경험과 레드컴플렉스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실제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관념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념에 의해 형성된 것은 다시 관념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해체시키거나 실제 경험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러한 것은 북한과 북한 주민, 그리고 통일이라는 사건을 심리적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교육하면 된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남한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은 제 7차 교육과정 해당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노력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 그 이후 해당 청소년들에게는 평화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므로(정현백 등, 2002) 문제가 없다. 물론 향후 북한에서도 남한에서의 이러한 노력을 배워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통일 이전인 교류시기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통일 진행 과정과 그 이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교육 대상자를 6.25 전쟁경험자 집단, 6차교육과정 이전 대상자 집단, 그 이후 대상자 집단 등으로 구분하여 통일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남북한 내부의 문화 심리적 요소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원래는 유사했지만, 현재는 상이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남한은 이전보다 상당히 민주화되어 가고 있고, 분파의식과 자폐성을 해소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요소의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시민사회의 성숙을 꾀하는 노력도 병행해야만 한다.

독일에서 전이되는 요소의 차단

앞서 언급한 바대로 독일의 사례는 우리 한민족과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고 배우고 있다. 그런데, 이 사례 연구에서 확인된 부정적인 결과가 무분별하게 우리 상황에 전이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렇게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한민족 자신들이고, 학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고의가 아닌 학문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국내에 유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의로 이러한 결과를 유입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들이 우리 상황에 전이되어 왔는가? 첫째는, 통일 독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이다. 즉,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다시 베를린 장벽을 쌓자’, ‘통일 후 마음의 벽은 더 높아가고 있다’와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통일을 부정적 시각에서 묘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통일을 잘못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국내에 전파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꼭 현실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주장한 것이라고는 믿지 않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통일은 사회적 재앙이므로 피해야 한다’는 식의 관점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의식조사에서도 ‘통일에 반대’ 내지 ‘통일에 관심 없다’는 등의 반응이 점증하고 있고, ‘당분간은 남북한이 공존하고, 미래에 조건이 맞으면 통일을 하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예, 이종환,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5).

둘째, ‘동독 열위, 서독 우위’에 대한 것이다. 이와 연관된 현상으로는 ‘구동독 주민의 2등 시민화’, ‘구서독 주민의 승리자 증후군’,

‘오씨(Ossi; 구동독인)족, 베씨(Wessi; 구서독인)족’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생 직후 이미 국내에 알려져서 이제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남한 주민들도 상당히 익숙해진 상태이고, 이에 따라 실제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차별받는다는 점을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2등 시민으로 취급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들 현상은 더욱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2등 시민’과 같이 특정 현상에 대한 확고한 명명(naming)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과 관련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결과만을 도입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구동독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구동독인들의 오스텔지아(Ostalgic; Nostalgie에서 Ossi 족에 맞게 맨 앞의 ‘N’을 탈락시킨 신조어)’ 등이 포함된다. 여러 조사 연구에서 구동독인들이 통일 이후 만족하고 있다는 점도 많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국내에 도입하면 구동독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북한 관련 사람들 즉,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혹은 ‘통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닿으면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다’, ‘북한에서 00가 제대로 되었다면 남한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미니어처(miniature)적 통일 상태인 현재의 남한 사회에서 자신들을 부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 발생한 현상과 연구 결과들을 우리 상황에 그대로 유입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문화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며, 더더욱 이러한 점들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미 유입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에 대해서는 관련자들 즉, 관련 학자, 북한이탈주민, 일반 국민에게 올바른 이해를 돕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역시 교류 시기부터 활발히 진행하고 통일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 제고

통일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사회적 변화이며 사건이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우리 한민족의 개별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새로운 적응력을 가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가 심할 경우 ‘통일이라는 변화에 무관심 또는 저항’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종한 등(2005)이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지지, 반대, 무관심의 스펙트럼’이라는 연구를 통해 특히, 무관심과 반대의 이유가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통일에 따른 기대 편익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임을 밝혀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 스스로 만든 면도 있지만 독일 사례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 규범적 이상(理想)으로서의 문화와 실제 행해지는 문화 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한 간극이 존재해왔다는 Schwartz(1993)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통일 아노미 현상’을 추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

다. 통일 아노미 현상은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 환경과 정책은 크게 변해 나가는데, 이에 대해 각 개인들의 의식이 발맞춰나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한민족의 통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상하고 준비해서 해결해야 한다.

차재호(1993)는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개인의 정체성 문제’,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문제’, ‘차별과 집단 간 갈등의 문제’, ‘부적응자의 발생 문제’, ‘자살, 범죄 등의 심리학적 문제’를 제시했다. 이들 모두 국민 개개인들의 적응력이 제고되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들의 적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 해결 방법이란, 통일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교류시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들과 개인적 상황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상과 그에 적합한 구체적인 대처 방략과 대처 자원 마련, 그리고 이 때 필요한 대처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사건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부정적인 사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혼합형 사건 묶음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통일에 대한 과도한 기대도, 과도한 걱정도 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인 시민교육이나 학교교육이라는 형태로 할 수도 있지만, 통일이라는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예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후유증 해소

통일과 같은 큰 사회적 변화를 아무리 잘 준비하여 대처해 나간다고 해도 체제 차원에

서나 개인 차원에서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후유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현실적 기대를 하지 말고, 오히려 어느 정도의 후유증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잘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독일의 사례에서 '구동독주민의 2등 시민화' 현상 같은 것은 소위 '흡수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흡수하는 쪽보단 흡수되는 쪽이 최소한 뭔가 모르게 심리적으로 열위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에서 발생한 다른 후유증이 이렇듯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다. 예상을 했으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거나 방지할 수 있었던 것들도 많았다. 예를 들면, 통일 독일 정부는 구동독주민들 중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 즉, 대부분의 정치지도자, 언론인, 고위급 장교, 교육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 해당 직위에서 쫓아버렸다. 이로써 시간이 흘러 구동독주민들이 자신들이 정치적 주장을 해야 할 때, 자신들의 대변자들이 이와 같은 조치 때문에 없어졌다고 느껴서 구서독 중심의 통일 독일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과거로의 회귀라는 오스탈지아(Ostalgic) 추구의 피안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통일 이후 많은 적응장애를 가질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범죄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를 저지할 수도 있다. 실제로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는 범죄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신나치주의자들의 범죄가 증가했다. 물론 적응장애라고 볼 수 있는 심신질환도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일 교

육 차원에서 사전 예방 교육 즉,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자아강화 프로그램, 갈등 해결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실시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즉각적인 심리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 관련 심리상담소나 치료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통일 단계별 사람중심의 통일 교육의 실천

통일교육관과 심리적 문제

한만길 등(2003)은 통일교육이 1998년부터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여 그림 2와 같이 체제우위의 접근방향에서 평화공존의 접근방향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접근 방법이 꼭 통일 이후까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통일이후에 상호이해 등을 교육한다고 하면서 '남한이나 남한주민', '북한이나 북한주민' 등의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면 과거지향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집단범주화 형태로 인식상의 사회 분열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원래부터 한 나라의 시민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실시하는 교육과 같은 형식의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표 2를 보면, 명시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만이 심리적 측면에 가장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이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 통일에 대해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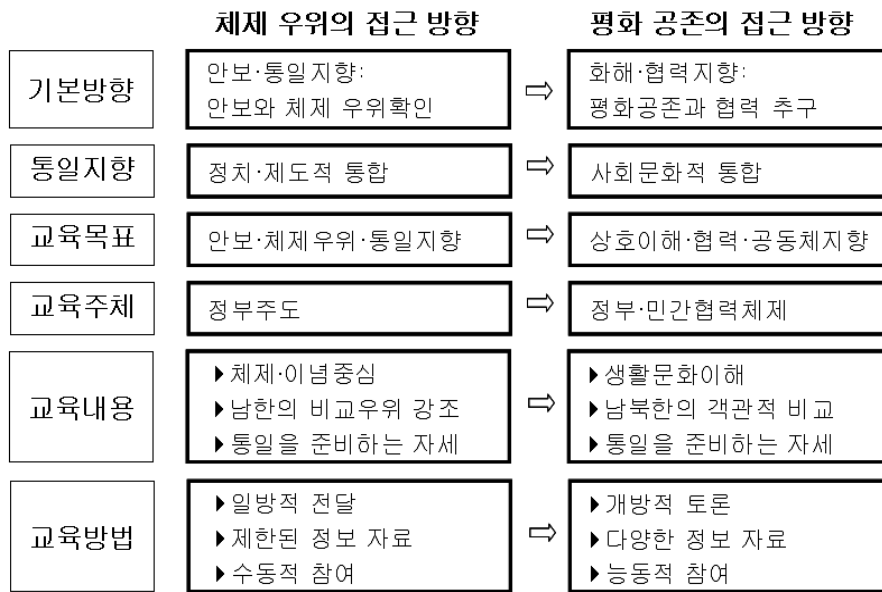


그림 2. 통일교육 접근 방향의 변화

출처: 한만길 등 (2003).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통일연구원, 21쪽.

표 2. 통일교육의 실태와 성과분석의 틀

부문	주요 내용	분석의 준거
통일교육 방향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추구 ■ 평화와 협력의 태도 형성 ■ 북한사회의 객관적 이해 ■ 민족공동체 의식 배양 ■ 바람직한 통일안보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가 우리 민족과 통일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당하게 설정되어 있다.
통일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필요성 ■ 북한사회의 이해 ■ 통일 환경의 변화 이해 ■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의 내용이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구성·조직되어 있다. ■ 북한사회와 통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출처: 한만길 등 (2003).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통일연구원, 142-143쪽
(본 연구자들이 발췌 인용한 것임을 밝힘)

민적 합의 도출 등과 관련된 것에 국한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전환된 통일교육관과 이 통일교육의 부문별 내용을 연계하여 자세

히 검토해보면, 여전히 통일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한 심리적 측면, 즉 통일에 대한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비용·편익

문제, 대인관계 방식과 사회적 기술의 습득 문제, 정신건강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교류의 시기와 통일 이후의 시기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채정민, 한성열, 이종한과 금명자(2007)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양측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가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도 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제시했다. 또한,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과 이영이(2007)의 연구에서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향후 북한주민이 이 입장이 될 것임) 간의 대인관계 능력과 문화 적응 능력이 중요함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주제는 그림 2의 교육 내용에 '생활문화이해'나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의 영역으로 해결될 수 없는, 고유한 심리적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심리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통일교육에 적극 반영된다면, 통일교육이 가진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이고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인 통일교육이라고 인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통일이 단순히 체제적 통일이 아닌, 사람을 위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은 독일의 시민정치교육이나 미국의 민주시민교육, 영국의 평화교육의 장점에 해당되는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교류시기의 사람중심의 통일 교육의 내용

교류시기의 사람중심의 통일 교육은 그 시기의 거시적 요인의 특성에 맞추어야 하며, 통일 이후의 거시적 요인의 특성까지를 감안

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류시기의 거시적 요인의 변화 특성에 맞게 행동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교류 시기에는 우선 통일교육의 의미를 정확히 알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처음부터 좋은 결실을 맺어야만 향후에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타성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적합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을 피교육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이 정치 이념 등의 교육이 아닌 사람중심의 통일 교육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통일이 인간지향적인 이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인간중심성이 부각될 때 비로소 통일이 충분히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일 이후에도 지속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수용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통일교육의 생활화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독일과는 달리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겪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갈등과 적대적 대립이 있었다는 점에서 과거에 대한 충분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분단의 이유, 과정, 그에 의해 빚어진 현재의 모습을 충분히 알도록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겪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과거사를 심리적 정화라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특히, 전쟁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포로, 납북자 문제, 공안사범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레드컴플렉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표 3. 교류시기의 심리적 통일 교육 내용

차원	내용	통일 이후 지속성
통일 교육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교육의 중요성, 초기 교육의 중요성 ■ ‘과거의 통일교육 ≠ 현재의 통일교육’ ■ ‘통일 교육 = 통일 심리 교육’ 	지속 필요
분단의 인식과 과거사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 이유와 과정, 현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심리적 정화를 통한 과거사 정리(국가 차원, 개인차원) 	
통일 의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의 편익(국가 차원, 개인 차원) 	지속 필요
남북한 현실과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어제와 오늘 ■ 남북한의 미래(분단상태 vs. 통일상태) 	
대인관계능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주민 이해 ■ 대인관계 기술 ■ 갈등 이해와 관리 ■ 스트레스 이해와 관리 	지속적인 연계 필요
시민 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의미와 자세 ■ 다문화 사회 이해와 적응법 	지속적인 연계 필요
개인 희망 갖기와 욕구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제작과 관리 ■ 상황 판단력 제고, 기대 조절 	지속적인 연계 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는 통일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 이때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보도록 하고, 이들 간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감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 비용과 편익 문제는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남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현실지향적이고 현실적응적인 통일을 이루고, 개개인들이 각자의 현실 상황에서 통일을 판단해나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이 과정은 통일 이후에는 굳이 남한과 북한을 구분해서 불필

요가 없기도 하고, 구분해서 오히려 인식상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할 필요는 없다.

대인관계능력은 통일과 관련없이도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양측 주민들이 상대방들에 대해 거의 모든 측면에서 처음으로 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대인관계능력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통일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교류가 활발한 시기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검증할 것이므로 통일교육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남북한 주민 상호간 이해 증진, 대인관계에 필요한 각종 기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처 및 관리 기법, 그리고 대인관계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

스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스 이해와 관리 기법 등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통일 이후 통일교육을 종료하더라도 별도의 교육 형태로 지속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현재에도 건전하고 올바른 시민의식과 행동이 필요하며, 동남아 지역 등 세계 곳곳으로부터 국내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법이 필요하다. 더욱이 통일의 교류시기에는 남북한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이므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양해야 하고,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부분도 통일교육이 종료되더라도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통일 이후뿐만 아니라 교류의 시기에도 여러 희망적 전망이 존재할 수 있는데,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과도한 희망을 가지거나 너무 적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 두 방향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하고, 이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희망 또한 각 개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통일 이후의 사람중심의 통일 교육의 내용

원칙적으로, 통일 이후의 사람중심의 통일 교육에 대한 계획은 ‘통일 방안이 무엇인가’, ‘언제 통일이 되는가’ 등의 제반 요소가 결정되거나 윤곽을 보일 때에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독일 사례를 보더라도 수많은 후유증들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후유증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후유증을 갖게 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바람직한가 등을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이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정부나 NGO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통일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각 개인들이 ‘잘 되면 내 탓, 잘못 되면 통일 탓 혹은 정부 탓, 나아가서 상대편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의 발생 기제에 대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로 인한 문제의 확대 재생산과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통일 환경에 맞도록 제도의 표준화 및 재표준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저항과 같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피로 증상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통일 후유증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지만, 통일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 기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도 통일교육의 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통일된 국민 전체에게 과거 동질성보다는 미래 동질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여기서 미래 동질성이란, 과거의 공통된 경험이라는 동질성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고 응집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공통된 기대 경험이라는 동질성을 중심으로 사회가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동질성은 현실적으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과 미래 사회에 적합한가가 의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미래 동질성은 공동 운명체라는 점에 쉽게 동의할 수 있기 때

문에 중요한 주제이다. 현재 남북한 간에 추진되는 경제공동체도 현재 동질성과 미래 동질성의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결 론

통일된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통일은 제대로 시작하여 제대로 끝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리로 시작해서 심리로 끝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제도를 변경하고 완성시키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들의 의사에 따라 통일 여부를 결정하고, 국민 개개인들의 심리적 불만족이 적고 만족이 높아야만 통일이 제대로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은 통일은 되었지만 제대로 된 통일을 이루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과거의 통일교육이 체제나 이데올로기 문제를 주로 다룬 정치적 통일교육에 치우친 점을 극복하여 사람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방식의 통일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통일교육에서는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기 구분이라는 차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를 구분하지 않은 통일교육은 통일 이전에 상당히 긴 시기 동안 양측이 교류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류시기는 그 나

름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통일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교류시기에는 상호간의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아직은 각자의 집단 정체감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통일의지를 접고 반통일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독일에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교류시기에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즉 상호이해와 대인관계 기술 등의 문제에 대한 통일교육이 절실하고, 향후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해야 하며, 통일 이전에 정리해야 할 과거의 좋지 않은 심리적 경험들, 예를 들어 레드컴플렉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통일 후에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설계와 대응능력 배양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 한민족에게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류시기와 통일 이후 등 통일교육의 시기별 적합한 내용들을 구분해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통일 준비를 위한 통일교육은 남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은 남한에 대한 적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교육도 향후 전개될 교류시기에는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상호 협조 하에 미래의 한 지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동반자적 관계이므로 이에 적합한 통일교육관과 내용으로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표(road-map)와 전체 계획(master-plan)을 구축하여 시의적절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해야만 독일이 경험한 통일 후유증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하고, 감소시키고,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이질감(채정민, 이종한, 2004)을 해소하고, 갈등(박종철 등, 2004)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모델인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은 ‘사람을 위한 통일, 사람에 의한 통일, 사람의 심리적 기제를 활용한 통일’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민감하고 유연하고 적응력 있게 살피서 이를 사람중심의 통일교육에 반영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통일교육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기존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 김영탁 (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용민, 정상돈, 원준호 (2004). 갈등을 넘어 통일로 - 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 통일교육원.
- 김정훈 (2001). 분단체제와 반공병영사회의 담론적 형성 - 반공주의, 발전주의, 민족주의의 접합. 2001년 역사문제연구소 심포지엄.
- 김해순 (2002).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통일교육에의 시사점. 서울: 통일교육원.
- 민족통일연구원 (1994). 통일문화연구(上).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민족통일연구원 (1994). 통일문화연구(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박종철, 김인영, 김인춘, 김학성, 양현모, 오승렬, 허문영 (20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통일연구원.
- 백낙청 (1998).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성태규 (2002). 동독주민의 ‘2등 국민’ 의식의 원인에 관한 일고. 사회과학연구, 10, 9-30.
- 이장호 (1999). 통일의 심리학적 접근. 이정복, 신옥희, 이승훈, 임현진, 김광익, 이장호, 박삼옥, 조홍식, 강현두.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175-19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5). 오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지지, 반대, 무관심의 스펙트럼.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이해영 (2000).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서울: 푸른숲.
- 전태국 (2000). 사회통합의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2000년도 춘계심포지움.
- 정상돈 (2001). 독일의 정치교육: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지속과 변동, 남북한 사회문화 변동과 21세기 한국인상 (2).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정현백, 김엘리, 김정수 (2002).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서울: 통일교육원.
- 차재호 (1993).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심리학적 조망. 한국 심리학회 편. 남북의 장벽을 넘어서: 통일과 심리적 화합.(pp.1-17). 서울: 한국심리학회.
- 차재호 (2000). 통일에 있어 심리적 통합의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2000년도 춘계심포지움.
- 채구묵 (1998). 독일통일의 후유증과 한국통일. 한국사회학, 32, 449-474.
- 채정민, 이종한 (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 문제, 10(2), 79-101.
- 채정민, 한성열, 이종환, 금명자 (2007). 독일의 정신건강 연구를 통해 본 한국의 통일심리학 방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91-114.
- 한만길 (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 한만길, 길은배, 강영혜, 김학성, 오해섭, 최영표 (2003).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 한성열, 이종환, 금명자, 채정민, 이영이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33-54.
- 함택영, 구갑우, 김용복, 이향규 (2003). 남북한 평화체제의 건설과 통일교육: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수렴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9(4), 33-60.
- Galtung, J. (1989). The neutralization approach to Korean reunification. M. Hass, (eds.) *Korean reunification: Alternative pathway*(New York: Praeger).
- Genosko, J. (2000). 독일의 내적 통일에 대한 중간결산. 통독 10주년 기념 한,독 특별심포지움, 3-32.
- Schmitt, M., Maes, J., & Seiler, U. (1997). *Ergebnisbericht: Gerechtigkeit als innerdeutsches Problem*. GIP. Uni. Trier.
- Schwartz, B. I. (1993). *Culture, modernity, and nationalism-Further reflections*. *Daedalus*, 122(3), p.212.
- Steiner, H. (1999). 독일 통일과정에서 사회과학의 역할. 민족통일과 사회통합-독일의 경험과 한국의 미래, 한국사회학회회편, 141- 178.
- Weidenfeld, W., & Korte, K-R. (1996).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Aktualisierte Neuausg, Frankfurt/Main; New York. 임종현, 신현기, 백경학, 배정환, 최필준 역(1997). 독일통일 백서. 한겨레신문사: 서울.

1 차 원고 접수일 : 2007. 10. 10

최종 원고 접수일 : 2007. 11. 26

A model for person-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the stages of the unification

Jung-Min Chae

Korea University

Jong-Nam Kim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what psychological education is needed for activation of interchange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and ultimately for the completion of Korean unification. We learned this reason from the German unification case. The Germany was unified 17 years ago, but many researchers evaluate that it will take about 30 years more for German people to complete real and inner unification. So, we proposed our own unification education in a psychological aspect for faster and inner unification,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we should go ahead according to our situation, not simply follow the way Germany went. Therefore, we should start psychological education for unification from now on, even though unification is not accomplished at the present and Germany didn't do that. Because we can predict the pre-unification (interchange) stage would be long unlike the Germany, psychological education for unification is needed during this interchange stage consistently. For the person-oriented unification education, we should educate adaptation-enhancement strategy for each person to keep psychological stability in the interchange and unification stage, beyond simply educating ideology focusing on the political and structural unification.

Key words : unification, interchange, education, psychology, integration